

[자료집]

907기후정의행진 후속 토론회

9월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운동의 과제



10. 17(목) 낮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사회 이영경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기획팀장

**발제 9월 기후정의행진의 흐름과
기후정의 운동에서의 의미와 이후 과제**

정록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

패널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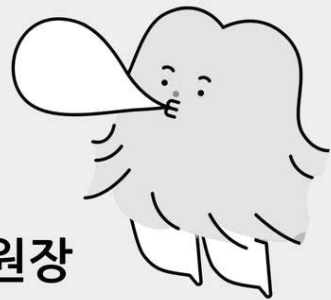
조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안승찬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임준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신청 bit.ly/907forum



907기후정의행진 유튜브 라이브 중계

[발 제]

9월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과제

정록 / 90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1. 9월 기후정의행진, 지난 3년의 궤적

1) ‘기후비상사태’에서 ‘기후정의-체제전환’으로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대중집회가(7천여 명)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기후대중운동이 한국사회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었다. 불과 1년 전인 2018년 10월, 전세계를 경악에 빠뜨린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5도 특별보고서’가 인천 송도에서 발표되었음에도 주요 언론보도조차 거의 없었던 한국에서 말이다. 누군가는 한국사회의 ‘기후무관심’을 한탄했지만, 시민들은 과거 ‘지구온난화’ 해외뉴스와는 이미 다른 차원의 인식과 경험 속에서 ‘기후운동’의 촉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2019년 9월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선언하고 그에 합당한 법제도와 국가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뒤이은 ‘코로나19’로 기후대중집회는 가로막혔지만, 기후생태위기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져갔다. 난생 처음 겪는 펜데믹은 많은 이들에게 ‘기후생태위기’의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다. 한편 놀라울 정도로 ‘기후위기’에 무관심했던 한국 정부는 갑자기 2020년부터 ‘2050 탄소중립선언’, ‘탄소중립녹색성장법 제정’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을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기회로 보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19년 9월행동의 요구들을 정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신속히 포섭/흡수한 것이다.

2020~21년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기후생태위기’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정부의 대응이 ‘기후생태위기’를 중심에 두는 게 아닌 다시금 녹색성장이라는 ‘경제성장전략’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났다. ‘탄소중립’ 프레임 아래 온실가스 감축은 국경을 넘어 외주화되고, ‘탈탄소 산업전환’은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구조조정’의 다른 이름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자본의 돈 벌이 시장인 ‘에너지 민영화’의 핵심 통로가 되고 있다. 농촌은 농업말살에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의 수탈지가 되어 갔다.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드러난 전력소비증가는 그린뉴딜의 핵심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였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확대’를 덧붙였다.

이는 2022년, 9월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정의-체제전환’을 전면에 내걸면서 대규모로 조직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2019년 뒤늦게 등장한 ‘기후대중운동’은 펜데믹을 경과하며,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경험하면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라는 관점과 운동방향으로, 정부 정책비판을 넘어 ‘체제비판/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2022년, 23년 9월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체제전환’을 외치면서 수만명의 대중들과 함께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자칭타칭 ‘기후전문가’들이 설계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비판하며,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불평등이 재난’임을 선언하고, 해고위기에 놓인 발전노동자들이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철도노동자들이 공공교통 확충과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다. 올해 9월 행진에서는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맞선 전국 곳곳의 투쟁이 에너지 정의이자 기후정의임을 외쳤다. 기후위기 대응과 반대로 가는 신공항, 케이블카, 4대강 개발사업에 맞선 투쟁들이 기후정의 투쟁현장으로 함께 외쳐졌다.

2) 체제비판, 전환의 전략 그리고 운동의 조직

지난 3년 간 ‘9월 기후정의행진’은 매해 최소 2만 명 이상의 대중들이 결집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대중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5년간 짧은 한국 기후운동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기후생태위기’를 구체적인 삶의 위기와 연결짓는 ‘대중적 사회운동의 조직’, ‘개별 정책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전환’이라는 운동의 담대한 비전, 의제와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기후정의운동으로의 결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의 이러한 성과는 ‘기후생태위기’라는 심각한 현실에 기반한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전환’이라는 구호가 너무나 현실적인 상황 말이다. 이는 지난 30년 국제기후체제의 위선과 실패라는 역사 속에서 지구적 기후정의운동이 얻은 운동적 교훈이기도 하다.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그리고 이를 계승하며 덧붙여진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겪으며 ‘9월 기후정의행진’이라는 급진적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을 조직한 것이다.

관건은 체제전환의 담대한 비전이 구체적인 ‘전환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더욱 중요하게는 전환의 전략이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사회 세력간 쟁투의 과정 속에서 구상되고 작동할 수 있는 ‘대중운동/대중투쟁의 조직화’에 기초할 수 있는지이다. 이번 907 기후정의행진은 이러한 질문이 더욱 첨예하고 날카롭게 제기된 시간이었다.

2.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907 기후정의행진의 성과

1) 한국 사회운동 공동의 장이 된 ‘9월 기후정의행진’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전면에 등장한 장소였다면,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은 600개가 넘는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이 함께 조직위를 구성하고 자기과제와 전망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으로 결집하기 시작한 자리였다. 올해 907 기후정의행진은 이러한 흐름들을 더 다채롭고 큰 규모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기후정의행진을 평가하면서 연례행사처럼 관례화되면 참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번 907 행진에서는 조직위-집행위 차원의 계획을 넘어 참여단체들의 자발적인 조직화 흐름

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이 여러 단체들의 주요 일정으로 처음부터 계획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사전모임들을 통해 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후정의'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요구와 피켓을 만들면서 행진에 참여했다. 이는 9월행진을 매개로 풀뿌리 대중운동이 조직되는 중요한 흐름이다. 그 결과 907 당일 크고 작은 다양한 사전 집회들이 펼쳐졌고, 각 단체담당자들의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행진에 참석했으며, 행진과정에서 다양한 공연과 구호선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9월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기후정의'라는 지향이 한국 사회운동의 보편적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 반빈곤, 인권, 여성, 환경, 평화, 반차별, 농민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자기 과제와 전망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와 지향들을 발견하며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정의운동'은 다양한 사회운동을 넘나들며 서로를 연결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열어내고 있다.

22년, 23년 9월행진에서도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결집'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907 기후정의행진은 이러한 '연대와 결집'이 '기후정의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기후정의'가 사회운동 공동의 장이자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투쟁 현장이나 현안에 여러 운동이 함께 '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9월 기후정의행진'은 커다란 연대집회가 아니라, 기후정의운동으로 재구성/재조직된 다양한 사회운동이 대중을 조직하며 결집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대중운동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결집의 자리, '9월 기후정의행진'

이번 9월행진은 강남일대에서 펼쳐졌다. 강남대로를 가득메운 집회대오, 테헤란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행진이 펼쳐졌다.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장소인 '강남'에서 3만여 명이 도로를 가득메우며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치는 경험은 '거리의 정치'를 통해 몸으로 겪는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냈다. 즉 9월행진은 앞서 짚은 다양한 사회운동의 결집의 장이기도 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거리에 모이는 전국적 결집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9월행진의 지난 3년의 과정은 누가 어디에서 모여 무엇을 외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실행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22년에는 서울시청-세종대로 일대에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과 함께 기후정의운동의 등장을 알렸다면, 23년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광화문 정부청사를 향해 행진을 이어가면서 '위기를 넘는 우리의 대안'을 대정부 요구로 구체화하며 투쟁했다. 올해 행진은 '체제전환'의 구체적 대상인 '자본주의 체제'를 상징하는 '강남일대'에서 펼쳐진 것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와 이를 비호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이 펼쳐졌다. 더 빠른 더 많은 소비를 조장하며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대유통기업 '쿠팡'과 최대 온실가스 배출기업인 포스코를 규탄하는 행동들이 '기후재난 불평등 타파', '에너지 체제 전환', '생태계 파괴 개발사업 반대'라는 이번 행진 기조에 맞춘 거점행동으로 배치되었다.

지난 3년의 성과들이 축적되고, 강남에서 펼쳐진 행진의 기세 속에서 올해 언론보도 등도 과거와 달랐다. 예년에는 '기후위기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집회' 수준의 보도가 이어졌다면 올해는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보도되고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규탄하는 집회 발언과 내용이 함께 이야기되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

후위기 속에서 9월행진의 목소리가 더욱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3. 907 기후정의행진이 남긴 과제

1) 어떤 '9월 기후정의행진'을 만들 것인가

22년 9월행진에서는 '기후정의운동'의 가시화에 중점을 두었고, 뾰족한 요구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이고 뾰족한 요구를 만들어서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평가와 고민을 남겼다. 이를 받아 23년 9월행진에서는 대정부 요구를 성안하기 위한 '워크숍'과 조직위 토론을 충실히 진행했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배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구를 만드는 것과 이를 투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평가를 남겼다.

이번 907 기후정의행진에서도 3대 기조와 11개 세부요구에 대한 조직위에서의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행진의 기조와 요구에서 다양한 운동의 가치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에선 핵심기조와 요구가 잘 드러나지 않은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열된다는 아쉬움이 토로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현재 한국 사회운동에서 '9월 기후정의행진'이 놓인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다양한 사회운동이 스스로를 기후정의운동으로 재조직하면서 동시에 기후정의운동을 새롭게 구성하는 주체로서 기후정의운동에 대한 개입과 토론이 '9월행진의 기조와 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절박한 당면과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요구와 투쟁현장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결집의 필요가 상존하는 것이다.

'주장'이 아닌 '운동'의 성과로서 기후정의운동을 확장하는 '9월행진의 기조와 요구' 토론은 생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기후정의운동'의 대중적 공간인 9월행진의 힘이 행진 이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후정의 대중투쟁의 현장'들이 힘차게 조직되어야 한다. 행진 이후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더 많은 이들을 조직할 수 있는 '현장'을 일구고 조직해야 한다.

2) 기후정의 정신과 원칙 아래 '9월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907 기후정의행진의 전체 계획과 세부 요구를 확정하고 결의한 8월 1일 2차 조직위에서는 '조직위원회 구성 기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조직위 구성 기준에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수정안이 제기되었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어졌지만 토론을 통해 합의하지 못하고 표결 끝에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주된 토론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입장차가 아닌, 비례위성정당 참여 단체의 9월 행진 조직위 참여배제에 대한 입장차에 따른 것이었다. 수정안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지라도, 오히려 당일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비판이라는 대다수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었다. 지난 2차 조직위의 논쟁을 기후정의 정신과 원칙 아래 '9월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으로 함께 평가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위 구성기준'을 둘러싼 이견과 논쟁을 '표결'을 통해 종료했던 점은 반성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9월행진 조직위에 함께 하는 수많은 단체들은 목표와 활동양식에 있어 다양한 차이들을 보인다. 그럼에도 그동안 9월행진 조직위는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공동의 입장과 실천을 만들기 위한 논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그 힘으로 9월행진을 조직해왔다. 9월행진 조직위는 '안건'의 처리를 위한 '표결'이 아닌 공동의 입장과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이렇듯 기후정의 정신 아래 9월행진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다양하게 드러난다. 조직위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9월 행진의 기조와 요구를 성안하는 과정, 올해 행진을 어디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지 토론하는 과정, 평가를 통해 9월행진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 모두 기후정의 정신과 원칙 아래 '9월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다. 목적없이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토론은 소모적이지만, 함께 '9월 기후정의행진'을 기후정의 정신에 따라 조직하기 위한 토론은 공동의 입장을 만들고 더 많은 사회운동 단체, 개인들과 활동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정의 정신과 원칙 아래, 더 너르고 단단한 '9월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기 위한 상호 노력과 신뢰에 기반한 토론을 이어나가야 한다.

4. '기후정의 대중투쟁의 현장'과 이어져야 할 9월 기후정의행진

2019년 이후 짧은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역사를 돌아볼때, '9월 기후정의행진'으로 대표되는 기후정의운동은 중요한 갈림길 또는 도약의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1.5도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고 6년이 흐른 지금, 지구평균 기온 1.5도 돌파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과학적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기후위기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기후체제의 기후위기 대응이 '역사적 파산선고'를 받은 지금,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후정의-체제전환의 과제'를 기후정의운동이 자임하고 조직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후정의운동 세력으로 등장한 '9월 기후정의행진'과는 다른 차원의 '기후정의 대중투쟁의 현장'을 통해 쌓아나가야 한다.

당장 내년 말부터 정부의 노후석탄발전폐쇄 계획에 따라, 태안화력 1, 2호기가 폐쇄된다. 2030년까지 20기의 발전소가 폐쇄되고, 3,000명 이상이 대책없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노동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석탄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기후정의운동이 외쳐온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첫 번째 '투쟁 현장'이 될 것이다. 이 싸움은 단지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만을 요구하는 싸움이 아니기에 '기후정의-체제전환'의 구체적인 투쟁 현장이다. 시장화된 에너지 민영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지 않고서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총고용 보장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소 수명연장-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핵진흥 정책'에 맞선 싸움을 조직하지 않고서 에너지 전환의 전략을 구상하기는 어렵다.

체제전환의 다른 이름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더욱 광범위한 대중투쟁의 기획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후생태위

기가 가져온 변화 속에서 대중들이 느끼는 삶의 위기는 생각보다 크다. 탈탄소 산업전환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은 발전노동자들이 먼저 겪고 있을 뿐,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닥칠 것이다. 산업화 이후 수십년째 지속되어온 '살농정책'의 결과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초토화되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자본에게 현재 농업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농촌지역 자체를 에너지 생산과 폐기물 처리 장소로 수탈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농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자각하며 농업/농촌 수탈 구조의 '체제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급진적, 대중적 사회운동으로 등장한 기후정의운동은 이러한 현실에 비춰 얼마나 '기후정의 대중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게 된다. 9월 행진이 커다란 규모의 대중적 행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위기를 '기후위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연결지으며, '체제전환'의 상상력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체제전환의 담대한 비전과 운동의 대중적 확장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중들의 삶의 위기에 깊이 공명하고 이를 바꿔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중투쟁의 조직은 '체제전환'의 전략과 비전 속에서 가능하다.

[토 론 1]

907 기후정의행진 평가토론회 토론문

조진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1. 성장하는 기후정의운동

- (자리매김) 9월 기후정의운동은 이제 9월 중 주요 저항운동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임. 노조는 물론, 주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연간사업계획에 9월 기후정의행진을 감안하고 이를 주요일정으로 여김. 때문에 주변에서 간혹 관성화 · 연례행사화 우려 말하나, 이는 아직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함. 현재 국내에서 연내 개최되는 집회 중 ① 민주노총이 주도하지 않고 ② 특정단위가 아닌 여러 단위가 공동집행 책임을 맡고 ③ 사실상 정기성을 띄며 ④ 1만명 이상의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할 실력이 되는 운동은 9월 기후정의행진이 유일함. 즉, 좌파적 목소리를 담아 이 정도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꽤 큰 성과로 ‘관성화, 연례행사화’라는 말로 깎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만약 향후 요구의 정치적 후퇴, 투쟁 인원 감소, 사회적 위상 격하 등 발생 시, 투쟁의 관성화에 따른 느슨함이 원인이었는지 분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 (운동장) 백화점식으로 요구를 나열한다는 비판 존재. 그러나 이는 다종다양한 운동단체들이 단일한 혹은 날카로운 구체적 요구만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면 불가피. 되려, 주요 요구들을 큰 개념어들로 묶어내, 더 많은 대중을 분노로 이끌고 투쟁에 참여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9월 기후정의행진은 이를 관통하는 고유한 요구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동요구의 집결지로서 기후정의에 공감하는 운동세력을 묶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음. 각 영역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모순점을 9월 기후정의행진 운동으로 가져와 홍보·선전·투쟁으로 알려내고 이를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연결, 체제전환의 주요 기제로 삼는 발전 가능. 즉,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사회의 주요 모순점들을 기후위기로 수렴시키는, 저항공간으로서 ‘운동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훌륭한 역할 수행 중. 이는 전체 사회운동 성장의 좋은 거름 역할. 3차 조직위 회의결과를 보면, ‘60%의 응답자가 “다양한 사회운동의 폭넓은 연대와 결집”를, 48.3%의 응답자가 “대규모 인원의 참가”를 꼽음’이라고 평가. 이미 다수의 참가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는 그 자체로 큰 자신감을 얻고 있음 확인 가능.

2. 기후정의행진의 과제

- (공동전선)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2차 조직위 당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제외에 기권표를 던짐. 대중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조직과의 관계를 고려함과 동시에 해당 결정이 907기후정의행진 운동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도 고려했음. 적어도 907기후정의행진이 표방하는 것이 ‘공동

전선'이라면 최대한 많은 대중이 이 운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단체 간 이견이 있더라도 최대한 공동의 투쟁체를 만드는 것이 활동가 본연의 임무일 것. 그러나 이전 운동의 전술적 잘못들에 대한 과오를 이유로 사회운동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종파적 태도로 비춰질 수 밖에 없음. 다만 표결 결과로도 드러났듯이, 소위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제 정당이 보수정당 주도 비례위성정당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연대단위의 불쾌함을 숫자로 확인하게 된 이상 향후 공동전선 건설의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함. 더불어, 발제자의 언급대로 2차 조직위 당시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한 의견일치 향환 숙고과정보다 표결의 시급함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어 이뤄진 투표는 결과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했음.

- (실무력) '관성화' 비판을 들을 만큼의 반복이라면, 집회 개최에서의 실무적 미비점은 거의 없었거나, 예측 가능한 실수들이었어야 함. 그러나 당일 경찰의 집회통제 및 LED와 스피커의 부족은, 해를 거친 집회의 실무력으로 보기에는 부족했음. 해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완성도 있는 집회 기획이 더욱 중요함. (조직위 기획팀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올해 참가 대중의 35%는 기후정의행진 참여가 처음이었음) '기후정의행진' 이름에 걸맞게 본대회를 최소화하고, 행진내 발언과 거점액션 등을 강화해 세부쟁점을 알려내는 등의 방식 변화도 고민해볼 지점.

- (조직과 홍보의 연계) 기후정의행진의 조직 및 운동건설을 고려한 홍보방향 강화될 필요. 그런 점에서 ① 제 단체와 지역의 대표자들 및 활동가들, 기후관련 유명인 활용 홍보방식 ② 각 단위 요구를 소개하는 카드뉴스제작 등의 방식 부재 아쉬움. 전국 곳곳에서 운동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이 운동을 지지하는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은 운동조직화와 홍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현장 반응도 좋고 참가동력을 올리는 데도 효율적임. 반면 쇼츠영상을 활용한 홍보는 3차 조직위 회의결과를 보더라도 인스타그램(도달:96,000)과 페이스북(도달:12,000)이 비하면, 유튜브의 조회수의 경우 1만회(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내 영상조회수가 별도로 잡히는 것을 감안해도, 영상·쇼츠 통한 선전방식은 비효과적)에 불과. 외려 각 단위의 요구를 자세히 + 짧게 소개하는 카드뉴스가 해당조직의 조직화에 바로 활용 가능한 것에 비춰보면, 향후에는 카드뉴스 및 이미지 활용 필요. 홍보영상 제작할 경우, 차라리 심의 없이 노출수가 보장된 유튜브 광고집행이 비용 대비 효과적. 907집행위가 발표한 올해 참가자 설문결과 "소속된 단체를 통해 행진을 알게 된 경우(70.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체들이 자신들의 회원을 조직화하는데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강화 필요.

3. 노동조합 조직화와 향후 과제

- (노조참여) 노조는 자체 집회가 아님에도 조합원 내부 간 집회 개최·참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것을 볼 때, 기후정의행진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해보임. 또한 행진간 노조 내 주요 기후악당사업장인 쿠팡을 거쳐가며 기후정의행진운동의 이름으로 물리력 동원도 망설이지 않아, 예년부터 종종 제기되었던 '안전한 투쟁', '투쟁적이지 못한 행진' 평가도 듣지 않게 됨. 되려, 아이들도 참여한 집회에 위협감을 토로한 학부모참가단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되어야 할

필요 있음.

구분	2022기후정의행진	2023기후정의행진	2024기후정의행진
참여단체	400개	623개	645개
추진위원	2,500여명	2,600여명	2,245명
모금액	1억9천만원	1억8천만원	1억원
전체참여	2만5천명	2만명	3만명
노조참여	350명	850명	670명

- (2025기후정의행진)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되는 해. 기후정의와 계급적 요구가 맞닿아 시험대에 오를 첫 순간이자, 이 투쟁의 결과가 향후 투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 노동자들의 요구가 당장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노동계급의 자신감 획득이 향후 운동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전노동자 투쟁에 압도적 연대와 지지가 필요함.

[토 론 2]

〈9월 기후정의행진의 의미와 과제〉에 부쳐

- 복잡하고 다단하여 서글픈 삼농의 사정을 고했

정은정 / 농촌사회학 연구자, 대한민국치킨전 저자

토론문 작성에서 도입부는 늘 ‘귀한 자리,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곤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선 내 위치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애매하여 저런 보통의 인사를 건네기도 쉽지 않다. 우선 제안받은 토론의 위치(혹은 주제)가 농업·농촌·농민, 보통 ‘삼농’이라 부르는 이 위치에 서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사실 농민이나 농민운동가들이 나와야 한다.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내 토론의 한계를 먼저 감안해 주길 바란다.

이 토론을 제안받고 여러 복잡다단한 심정이 들었던 것은 이번 9월기후정의행진(이하 9월행진)에서 대중농민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즉 전농이 공식결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토론 전에 나는 농민운동계의 대변인도 아니고 현재 농민운동의 흐름 전반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다만 발제문에서 9월 행진에 대한 평가로 ‘다양한 사회운동의 연대와 결집’은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907 기후정의행진은 이러한 ‘연대와 결집’이 ‘기후정의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의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기후정의’가 사회운동 공동의 장이자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라는 문장을 곱씹어 보았다.

당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의 공식결합과 부여의 신지연 여성농민의 기후재난과 여성농민의 절체절명에 대한 당사자 발언과 홍천군의 난개발 6종세트¹⁾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석현 농민의 당사자 발언이 있었다. 이 발언은 분명 기후위기가 촉발한 농촌과 농민의 고통을 증언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또 전농이 농민운동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이날 가톨릭농민회와 전여농이 결합했고 한살림 과 두레생협도 함께 했다. 농민운동의 특성상 여러 위치가 겹치고 교차되고 중복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농회원이면서 전농회원이고 전농회원이면서 전여농 회원인 경우도 있고 친환경농업협회 회원까지 중복). 다만 이 행진에 농민운동의 대중운동 조직인 전농이 이름을 걸지 않았는지, 공식적으로 왜 끈을 연결하지 못했을까. 연구자의 입장이자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비판과 애정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다.

이 짧은 토론 시간에 기후재난, 혹은 재앙으로도 부르는 농어민의 고통과 처지를 증언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최근 상황만 서설해 본다. 올해 가을의 주요 농업이슈는 쌀(값)과 벼멸구 피해, 배추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행진 당일에도 폭염으로 상당한 체력적 소모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런 행진을 고령의 농민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9월 기후가 갖는 특성은 이제 무

1) 홍천군은 양수발전소, 송전탑, 골프장, 소각장, 석산 개발, 태양광 시설까지 난개발 6종 세트를 말함.

더운 초가을이 아니라 한여름의 연장선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농작물의 시간이 꼬이고 이 농사를 지어 먹고살아야 하는 농민의 처지는 더 꼬여버렸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호남지역을 강타한 벼멸구 피해다. 9월 행진이 있는 직후인 9월 22일 기준으로 전국 벼멸구 피해면적은 약 2만6000ha로 2023년 675ha대비 70배 이상 피해가 증가하였고, 전체 논 3% 넘게 피해를 입었다. 전북 임실군의 경우 전체 논 70%가 피해를 입었다.

벼멸구가 지나가면 쌀의 양도 맛도 떨어져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 천덕꾸러기지만 미작중심 지역에서 쌀은 주요 수입원인 동시에 농촌사회의 주요 경제축이다. 벼멸구 피해만이 아니다. 여기에 뜨거운 폭염으로 쌀알 자체가 작아져 수율이 10%내외 줄어들었다는 것도 농민들의 현장 증언이다.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을 비교적 잘 하는 쌀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의 작물은 중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벼멸구 피해가 특정 지역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양상 때문에 이 피해는 여러 층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쌀생산량을 줄이라는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의도치 않게 벼멸구로 호남지역의 쌀생산량의 조정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²⁾ 기후위기가 농업계에 가혹한 것은 타지역과 타인의 고통은 누군가의 이익으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과소화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것에 더해 죄인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그간 주목해 온 것은 기후위기가 농업계의 커먼즈(Commons)를 어떻게 방해하는가이다. 협력, 공동체, 희망, 이웃, 상부상조.. 이런 말들의 작동이 농촌부터 멈출 수밖에 없는 데에는 기후위기가 유무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생활자인 내가 에어컨을 틀고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생의 절멸 문제 앞에 떠밀려진 곳이기 바로 농촌이고 농민이기 때문이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었고 이 사례는 병해충으로 인한 재해인정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병해충은 예찰과 방제로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지만 (인재라는 인식) 인간의 방어능력을 넘어서 재난의 차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의미화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연하자면 기후위기의 문제로 소득저하와 육체적, 정신적 건강위기, 공동체의 위기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이들은 농민당사자이다. 하지만 9월 행진에 공식적으로 결함을 선언하고 향후 함께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우선 기후위기의 주범이 누구인가에 대한 언설의 불편함을 농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장식축산'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과 심리적 타격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생계를 구성하는 일이 악마화되고 부정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의 쌀값은 폭락 상태다. 지난 9월 25일 산지 쌀값은 80kg당 17만4592원(20kg당 4만3648원)으로 지난해 10월 5일 쌀값 21만7552원(20kg당 5만4388원) 대비 19.7%나 하락하였고 햅쌀이 쏟아져 나오면 구곡의 처리 문제까지 겹쳐져 쌀값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수입 쌀 40만 3000톤의 의무수입량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농산물수입개방은 국제무역체제에서 한국이 선택한 일환이지만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 사용(화석연료)의 관점에서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나는 오래도록 축산업과 외식업, 육식문화의 다층적 측면을 펼쳐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양축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푸드시스템의 최하위 구조에 있는 한국 농업의 특징과 축산업의 딜레마를 들여다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한국에서 '고깃집'으로 대표되는 외식자영업의 문제가 얹혀 있다. 분명한 것은 공장식축산의 정의로운 전환을 필요하지만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과연 이 사회가 나눠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본격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는 특정집단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의 근본적인 감축과 사육 소농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논의에서 '먹자, 말자'의 논의에만 함몰될 경우 조금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³⁾

그리고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관행농들의 문제가 남는다. 비룻값과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의 의제가 결국 기후행진의 선언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민운동은 어느 면에서 이제 노인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농민도 늙었지만 농민운동의 고령화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농민대회를 열어도 행진과 몸싸움은 그야말로 극소수인 5060 세대가 떠맡고 고령의 농민들은 채 1킬로미터도 걷지 못하고 대오를 이탈하는 광경을 서글프게 마주한다. 농약과 비료를 쓰고 경운을 '관행대로' 해왔다는 점에서 관행농이긴 하지만 이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기에는 현재 농업의 고령화 문제는 핵심 변수다.

기후위기는 먹거리 위기이고 이 위기에 대한 대안은 친환경농업이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 2020년 대비 15% 감소해 2023년 기준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4.6%에 불과한 6만9412ha로 줄어든 상황이다. 친환경직불금의 지급 최대 면적기준과 직불금 단가 역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기후위기에 시급한 대안이자 실질적인 대안인 친환경농업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확대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 사태를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농법, 약탈적농법과 같은 용어들이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배제의 용어가 되었고, 감정적 거부와 심정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후문을 전한다. 가장 큰 피해자이며서도 가해자로 주목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함께하자 외쳤지만 농업계가 흔쾌히 손을 잡을 수 없는 복잡다단한 사유를 그대로 뭉개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 자리에 섰다. 다소 격앙되고 정제되지 않은 말과 글이었다 할지라도 시급성과 난감함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니 널리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친다.

3)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400.html?fbclid=IwY2xjawF6yvtleHRuA2FlbQlxMQABHb2iwnbKXQ3v2dWjgBC4_psNPrNKjFTYXxou8rSpTSXgbFoKisQlwUiScQ_aem_ZvO0B10VYBOP5yEs2gMGYA 이에 대한 깊은 논의는 2022년 한겨레21에 본인이 기고한 “생명이고 상품이면서 생존, 고기는 복잡하다”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토 론 3]

9월 기후정의 행진의 (울산)지역에서의 과제

안승찬 /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토론문을 정리하면서 많은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토론문은 지역에서 논의를 거치지 못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울산에서 서로 소통하고 집단적 토론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후변화와 불평등에 대한 변화의 속도만큼 대중의 인식과 관심도 빠르게 변화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인식과 관점의 변화는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와 자연재난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운동, 체제 전환 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하는 대중을 기후정의 운동/체제 전환 운동으로 재조직하고, 공동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후정의 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조직되고 대중집회가 열렸고, 울산에서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구성이 제안되고 건설되었습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단체, 개인의 참여로 어느 연대단체보다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정당으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작은 시민모임도 참가를 희망했습니다. 이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전국적 차원에서 진행된 기후정의 행진에 모두의 동의를 통해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마다, 그리고 올해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 참가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후정의 행진의 참가가 관성화되어, 지역에서 기후정의 행진의 의미를 토론하고 공동으로 무언가를 준비하기보다는 단순히 참가하는 데 그친 것 같습니다. 참가하는 대중의 인식 개선과 대중운동으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방관한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에 공동주체로 참가를 제안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영남알프스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와 전국적인 9월 7일 기후정의 조직위원회에 참가한 '울산 노동자 참가단' '울산 노동자혁명당(준)' '노옥희재단추진위원회' '전교조 울산지부' 등과 공동으로 논의 틀을 만들고 논의하지 못하고 단순한 참가자 조직과 공동 상경에 그쳤습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참가 단체의 대표들과의 논의하고 조직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것으

로 결정하고 참석자를 조직하고 상경한 것입니다. 이는 역량의 한계가 있지만,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정의행진의 의미를 살려 기후정의 운동, 체제 전환 운동으로 발전해가고자 하는 인식과 노력이 부족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9월 7일 상경 버스에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 울산참가단' 명의를 붙이는 수준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참가단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와 집담회 등을 통해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의 의미와 내용을 공감하고 울산 지역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공동의 결정과 결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이 더 탄탄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연대운동체를 만들어 지고, 기후정의 운동과 체제 전환 운동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참가자가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운동의 대중적 강화와 운동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역량과 지도 집행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해마다 진행되는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후정의 운동에서의 대중화와 연대활동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타파, 기후정의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강화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대중이 참여하는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기후정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 현장의 불평등 문제, 탈탄소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문제 등 기후정의 투쟁에 시민의 참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와 기후정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요캠페인 등 다양한 실천 투쟁과 지역 현안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반대 투쟁, 탈핵 투쟁에 노동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중운동으로 강화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자자체에서의 올바른 수립을 위한 활동을 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기후정치, 기후유권자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업의 성장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계획되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뛰어넘어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야기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라는 관점과 운동방향으로,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체제 비판/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는 동의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이러한 운동과 노력이 기후정의 행진으로 모아지고 기후정의 운동의 발전을 위한 목표로 되지 못한 것은 과제로 두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이 단순한 행사 참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활동의 총화가 되고, 앞으로 투쟁의 방향과 과제를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다음의 공동행동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에 대한 울산 지역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문제 제기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집회에서 대오 뒤쪽에서의 대오는 전혀 함께하지 못한 점, 집회와 행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지역 참가 대오에 혼선과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오 뒤쪽에서는 누가 무슨 내용으로 연설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본 집회와 행진에 지역을 중심으로 참가자와 부문 및 전국 단체 회원 등 대오가 나누어 짐으로 많은 혼란과 지휘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행진이 끝나는 시간에 울산으로 간다는 당초 이야기에 따라 행진 도중 빠져 버스로 간 사람, 부문 및 자기 단체에 참가하여 행진을 끝까지 참가한 사람, 지역이 함께 행진하며 시간 문제로 중간에 빠진 대오 등으로 인한 혼선, 결국 전체가 집결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에 지역에 대한 배려와 시간 엄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 참가가 울산 지역에서의 기후정의 운동, 체제 전환 운동의 대중적 발전을 위한 지역 과제와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 론 4]

기독교 기후운동과 9월 기후정의행진

임준형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먼저 기후정의행진의 조직과 진행, 홍보와 운영을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일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신경써야 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고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장으로 기후정의행진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후정의행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기후위기 비상행동’ 통해 촉발된 한국사회의 기후운동은 각 부문과 지역에서 기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도 그 켄부터 발족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논의를 거쳐 발족한 이후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지금도 매주 금요일마다 거리에서 피케팅을 하고 계시지요.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함께하는 종교환경회의도 그 흐름 안에서 종교인 기후선언을 발표하고 기후운동에 함께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탄소중립선언을 만들고 발표하는 노력이나 개신교 각 교단 안에 기후위기를 위한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만들어가는 변화들이 일어난 계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는 큰 변화입니다. 그간 종교 안에서 환경의제나 기후의제들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고, 핵심의제로 다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변화가 급박하여 급격히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의제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린워싱이나 흥내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운동은 이 문제가 단순히 1.5℃ 기온상승을 막아내고 탄소를 줄이는 것, 혹은 그간 정부들이 만들어낸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이 말하듯 자본의 돈벌이 기회를 넘어서 체제의 전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후정의행진을 함께 준비하며 기독교 안에서는 다양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기후정의주일’을 만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교회들에 기후정의를 위한 예배를 위한 자료집을 배포하기도 했고, 9월에 기후정의를 위한 캠페인과 인식확산을 위한 계기로 삼은 활동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행진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행진 당일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획해 매년 100-200명 가량의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집회장소까지 행진을 하는 일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바로 집회장소에 모이는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집회에 교회나 단체이름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후위기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강연을 만들거나 자료를 공유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경전의 문구를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이 기독교이기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고 변화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907기후정의행진을 거치며 듣게 된 몇가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무척 좋았고, 참여하길 잘했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가운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고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기조와 요구사항에 대해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만일 이러한 운동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이들에게 이 행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를 고민하게 만든 지점이었습니다. 실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구체적이고 뾰족한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더불어 ‘요구’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정치권을 향한 압박을 위한 수단입니다만 효과적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언과 요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을 그려가는 것이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행동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현실의 과제를 늘어놓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 요구 대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실 그걸 대중이 함께하는 집회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선명하고 구체적인 것보단 때론 희망적이고, 따뜻한 것, 슬프거나 아픈 것, 감동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토 론 5]

9월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

조순형 /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

1. 기후정의운동의 현 상황 인식

1) 기후정의운동의 대중화 흐름으로 만든 2019년 기후정의행진

- 2019년 9월 ‘기후정의행진’이 기후정의운동의 중요한 기폭 작용
-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태동 배경에는 기존 환경단체를 넘어선 기후운동의 대중화
- 2019년 기후행진에 참여한 5,000여명은 미조직된 개인의 참여가 상당수
- 당시 기후행진의 요구안인 정치권의 비상행동 선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수립 등 일부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모두 수용하면서 큰 성과를 냄

2) 2022년부터 별도의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구성하면서 드러난 문제들

-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논쟁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분화되어 기후정의동맹을 조직
- 2022년부터 네트워크 밖의 “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정의행진을 운영
-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꾸리면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내 9월 기후정의행진의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가지지 못함. 이후 기후정의운동에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9월 기후정의 행진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도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세력이 약화됨
- 2019년 기후정의동맹이 분화되기 전 기후위기비상행동 한 조직이었을 당시에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단순했어도 서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음
- 2022년부터는 조직적 분화를 거친 기후정의동맹이 다시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의 명확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로 기후위기비상행동 산하단체의 의견이 과소대표되고 기후정의동맹의 의견이 과잉대표됨
- 급기야 많은 사람들이 9월 기후정의행진에서 논의해야 하는 의제인가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비례 위성정당의 참여 문제가 조직위원회에서 논의, 2023년과 2024년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 발생함.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문제

3) 기후정의행진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가 빠진 백화점식 운동

- 기후정의행진의 기조와 목적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방법’을 제시해야 함
- 기후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대부분은 각종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에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음. 그러나 연대의 원칙을 벗어나 특정 사안에 여러 가지 사안을 모두 모아서 백화점식의 운동을 펼치게 되면 핵심쟁점을 놓치게

됨

- 매년 새로 구성되는 한시적인 조직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핵심적인 슬로건과 요구사항의 편향성 문제로 귀결
- ‘체제 전환’ 논쟁과 ‘전기요금 인상 철회’ 논쟁에서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히 숙의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이고 비대중적인 메시지가 주를 이룸
-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함.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시급하게 해결하고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주요하게 요구해야 함, 그와 함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대안이 나와야 함
- 기후정의행진의 세부 요구에는 각 분야의 담론적 수준의 원칙적이고 당위적 요구가 대부분임. 철학과 담론은 철학자들의 몫, 활동가들은 참고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 논의해야 함

2. 기후정의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제언

1) 기후정의운동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정립하고 기후위기 대응 공동의 목표 수립 필요

- 기후정의운동이 중단기 공동의 목표 수립 필요
- 네트워크는 서로가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의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
- 5년째 탈석탄 운동만 하고 있음. 그 이후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운동이 보이지 않음. 반자본주의 운동은 결론에는 항상 이제 대안을 만들어 갈 시점이라고 하면서 5년째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음

2) 대중성 확보를 위한 큰 우산 운동

- 기후정의운동의 목표가 2030탈석탄 일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10만명 모으자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가 논의 되어야 함
- 9월 기후정의행진이 활동가들만을 조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일반 시민들을 조직하기 위한 더 큰 대중성, 자발성을 담보해야 함. 슬로건, 메시지를 조직하려고 하는 사람 들에게 테스트하고 검증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3) 조직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매년 9월 행진 조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는 소모성이 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집행부 인력 부족과 행진 준비기간 집행부의 다른 활동이 올스톱되는 문제 심각
- 한국 기후정의운동의 가장 큰 네트워크 조직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 9월 기후정의행진에 대한 논의가 조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고,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고 있음
-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의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주요 슬로건과 요구사항은 두 조직에서 합의, 결정